



내용문의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 02-3156-7107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 7. 8.(수)
보도시기	배포 즉시

※ 매수 : 총 5쪽

유권자 55.3% “여성 후보 부재” 이유로 여성 선택 못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장벽 개선 방안」
주요 조사결과 발표

유권자 다수, 여성 광역단체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
공천 과정 투명성 강화 요구 70.2%.. 정당의 여성 후보 발굴·육성 체계 개선 필요

<연구 소개>

본 연구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정치인의 부재 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연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여성 후보 출마 현황과 정치 경력 특성을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당 공천 사례, 여성 후보의 정치 경로 등을 분석하였음.

광역단체장 출마 경험 여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여성 정치인이 출마 및 공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진입장벽을 분석하였음.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 광역단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후보 선택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서 여성 광역단체장 부재의 주요 원인이 유권자 수요 부족이 아닌 정당 중심의 후보 공급 구조와 정치 경력 축적 과정에서의 성별 불균형에 있음을 확인함.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정당 공천 제도로의 개편, 여성 정치인의 중·장기 지원, 여성 리더십 강화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장벽 개선 방안」(책임 연구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에서 전국 광역시도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본 내용의 주요 출처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출처: 김은경·김복태·김둘순·김정수·이성준(2025),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장벽 개선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5년 7월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유권자 1,000명(여성 491명, 남성 509명)
조사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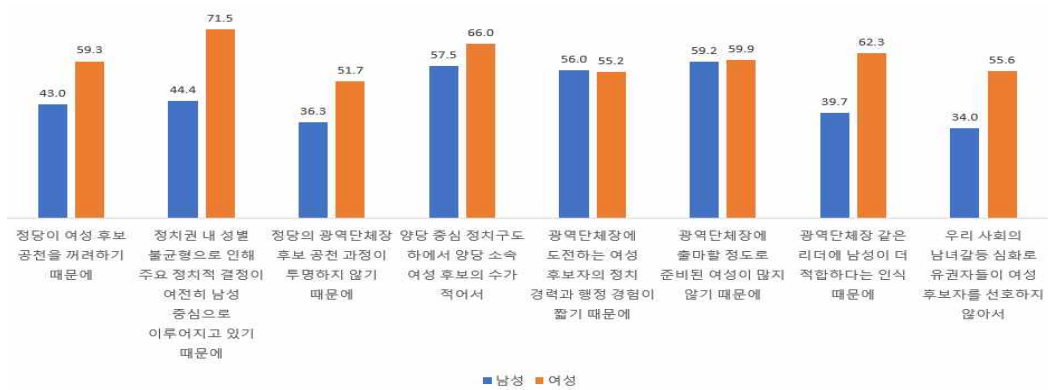
□ 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가 사는 선거구에 여성 후보가 출마한 적이 없어서’가 55.3%로 가장 높았다.



[그림 1]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 투표하지 않은 이유

□ 여성 광역단체장 부재의 원인에 대해서 여성 후보 수가 적다는 점(남성 57.5%, 여성 66.0%)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으나,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만큼 준비된 여성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남성 59.2%, 여성 59.9%)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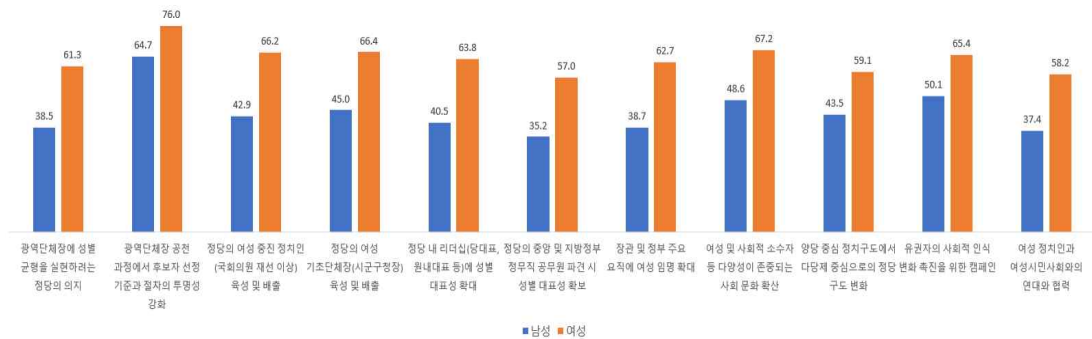
○ 여성은 공천 구조와 정치권 내 성별 불균형 등 구조적 장벽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한 반면, 남성은 여성 후보의 정치 경력과 행정 경험 부족 등 개인 역량 요인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 광역단체장에 여성 부재 원인에 대한 인식

- 여성 광역단체장 확대 방안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 정당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57.7%), 유권자의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57.6%), 정당의 여성 기초단체장 육성 및 배출(55.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 광역단체장에 여성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유권자가 여성 광역단체장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성 후보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 확인됐다” 라고 설명했다.
- “여성 광역단체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인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 정당이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천 구조와 정치 경력 형성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 연구진은 여성 광역단체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법·제도 개선, 정당의 당헌·당규 개선, 성평등 정치문화 확산을 제안했다.

-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 여성추천보조금 대상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포함, ▲ 여성(후보)추천이 아닌 여성당선보조금제로 개정, ▲ 여성 후보 공천 비율에 따른 선거보조금 삭감제 도입, ▲ 광역·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공천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정당 차원의 개선 과제로는 ▲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각각 20% 여성 공천 의무화, ▲ 지방선거 여성 공약에 여성 부단체장 임명 의무화, ▲ 전략·단수 공천 및 우선추천 지역에서 성별 대표성 제고, ▲ 여성정치발전비를 활용한 여성 정치인 성장 지원 등을 제안했다.

- 또한,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성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김종숙 원장은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더 높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 2026년 현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 20.0%, 광역의회 28.6%, 기초의회 36.8% 수준이지만, 광역단체장은 1명에 불과하고, 기초단체장은 4.0%에 그쳐 지방정부 집행부에서 특히 낮은 상황이다.

- 이번 보도자료에서 다룬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발간자료-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장벽 개선 방안 | 과제

책임자 :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4&idx=133644>